

촘촘하고 두툼한 복지

- 근로장려세제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
- 생계급여 대상자 및 지원금 확대
- 어려울 때 도움 주는 국민안심지원제도 시행
- 사회복지시설의 디지털화
-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
-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 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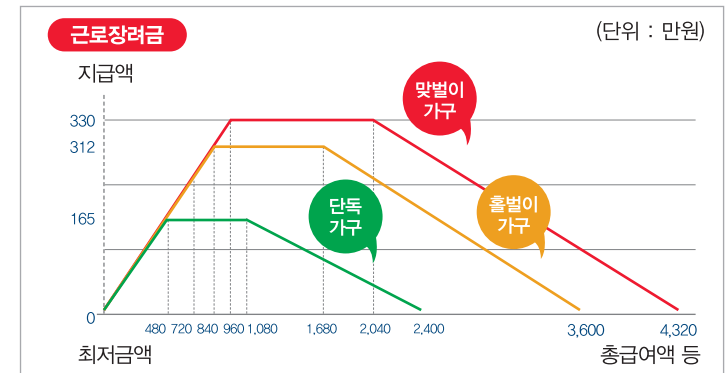
01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.

현재

- ▶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빈곤(중위소득 50%) 사이에 있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체계 미흡
- ▶ 일할 기회 제공과 함께 일을 통해 탈빈곤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 필요

약속

- ▶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
 - 근로장려세제(EITC)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, 최대지급액 상향



구분	현재		근로장려금 확대 공약	
	총소득 기준금액	최대지급액	총소득 기준금액 (20% 상향)	최대 지급액 (10%, 20% 상향)
가구원구성				
단독가구	2,000만원	150만원	2,400만원	165만원 (10% 상향)
홀벌이가구	3,000만원	260만원	3,600만원	312만원 (20% 상향)
맞벌이가구	3,600만원	300만원	4,320만원	330만원 (10% 상향)

02 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금을 확대하겠습니다.

현재

- ▶ 전반적인 복지확대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빈곤층이 소외되고 있으며,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 소득환산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광범위함
- ▶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해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고, 장애인, 노인, 아동을 포함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,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

약속

- ▶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%에서 35%로 단계적 상향
- 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 도입
 - 일정 금액 이하 거주주택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주거용재산 환산율(월 1.04%) 적용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
- ▶ 장애인, 노인, 아동,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10만원 추가 지급
- ▶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%까지 확대

03 어려울 때 도움 주는 국민안심지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.

현재

- ▶ 엄격한 선정기준과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처에 한계 노출
- ▶ 현행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대처에 미흡
 - 감염병,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불확실성 증가. 모든 국민의 재난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제도 필요
- ▶ 도움이 필요함에도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,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.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신속히 지원할 필요

약속

- ▶ **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·개선**
 -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및 가구주 사망, 실직, 이혼,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위기 사유 확대
 - 주거용 재산 기준 폐지, 금융재산 기준 상향
 - 선지원·후처리 원칙의 우선 지원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축소, 긴급복지 지원 인력을 확대해 국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
 - 지원금액을 현재 중위소득 26% 수준에서 중위소득 40% 수준으로 인상. 지원 기간을 기본 1개월 원칙에서 3개월로 확대
- ▶ **사회보장 관련 정보 간 연계,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축소**
 - 복지정보, 국세청·행정안전부 등 행정부처 자료 등 모든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해 생애주기별 특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게 관련 복지제도 사전 정보 제공,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개발
 - 단전·단수, 카드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복지서비스 제공

04 복지시설을 디지털-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.

현재

- ▶ 데이터 기반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, 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성 증대
 -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디지털 인프라(인터넷 환경, 디지털 기기 보급, 소프트웨어 개발, 인력 양성 등) 구축이 시급함
- ▶ 디지털, AI,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디지털화 필요

약속

- ▶ 사회서비스 디지털 현황 진단 및 디지털 전환 모델 개발
 -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의 디지털 업무 환경 진단
 - 사회서비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SOC 지원방안 설계 및 단계별 추진
 - 사회서비스 관련 데이터댐 구축
- ▶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디지털 역량 제고 교육 확대
- ▶ 스마트 복지시설 선도사업 및 전국 운영 확대
 - 스마트 복지시설 표준 서비스 개발
 - 스마트 복지시설 전국 운영 확대

05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고,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.

현재

- ▶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,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
- ▶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권익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필요

약속

- ▶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
 - 국고지원시설 및 지방이양시설 간 인건비 가이드라인 단일화 개선
 - 소관 부처간 임금 차이 합리적 교정
- ▶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
 - 요양보호사(재가 및 시설), 생활복지사(지역아동센터),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인력의 임금체계 개선(치매노인 간병 등 업무 강도 고려)
 - 강도 높은 돌봄 제공 시간 낮추고, 시급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돌봄 인력 고용
- ▶ 사회서비스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및 사회복지연수원 설치
 - 사회복지종사자의 신변 안전과 인권보호, 폭력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(권역별 지원기구 설치 고려)
 - 지역별 유희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 지원
 -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쉼과 회복을 위한 안식월제도 지원

06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겠습니다.

현재

- ▶ 기부 참여율이 감소 추세에 있어 기부 유인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필요

약속

- ▶ 기부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% 추가 상향
 - (1천만원 이하) 15% → 20%
 - (1천만원 초과) 30% → 35%

공정과 상식으로
만들어가는
새로운 대한민국